

“대기업 택배기사 취업” 500억대 사기...1900명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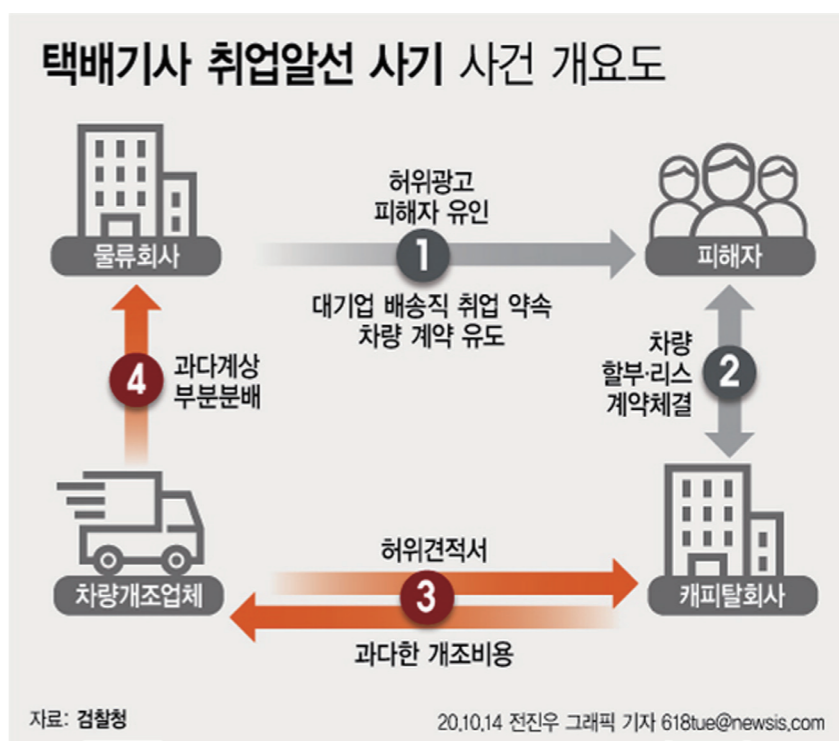
검찰, 지난 4월 운영자 구속기소
23명은 4·8·9월 걸쳐 불구속기소
피해자 1894명, 피해금액 523억
“대기업 계열사 오인토록 해 유인”

검찰이 대기업 소속 택배기사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해 화물차를 구입하게 한 뒤, 개조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500억원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총 24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사기 혐의를 받는 물류회사 및 13개 자회사 실질 운영자 A(38)씨를 지난 4월24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물류회사 직원 B(24)씨, 자회사 대표 C(37)씨, 차량개조업체 운영자 D(60)씨 등 23명에 대해서는 지난 4월과 8월, 9월에 걸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택배기사 구직자들에게 냉동탑차로 개조한 화물차를 구입해야 한다며 속이고 부풀린 개조비용으로 캐피탈 회사와 화물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차량개조 업체는 허위 견적서

를 내 캐피탈 회사로부터 부풀려진 개조비용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인·구직사이트에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를 가장해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배송직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3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설립해 구인·구직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대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회사명에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했다”면서 “사무실에서 대기업 택배 회사의 로고가 노출되는 동영상 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총 1894명이고, 피해금액(개조 비용이 부풀려진

냉동탑차 할부계약금 등)은 총 5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 여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결국 취업도 되지 않고 고액의 할부 대금 채무만 부담하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넘겨진 고소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관련 회사 사무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물류회사와 차량개조업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코로나19 부산서 집단 감염 발생, 선별진료소 찾은 시민 부산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 조치 되는 등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

광주지검 성범죄 기소유에 처분 잦대 오락가락 비판

성착취 피해자에 성매매 알선혐의 적용 등

광주지검의 기소유에 처분 잦대가 법 적용 대상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 의힘 전주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재청 7급 공무원이 어플로 만난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 공무원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

해 기소유에 처분을 내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질타했다.
이 태국인 여성은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소개받아 찾아가던 곳이 성매매 업소였다고 주장해왔다. 기소유에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재판관 9명 전원 기소유에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을 읽어봤더니 이 여성이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다. 자기 방어권 행사를 못할 수 있고, 충분히 조력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6년간 철도 성범죄 2배·몰카 4배 급증”

성범죄 비율 높아...대책 시급

지난 6년 간 철도 차량이나 역사 등에서 성범죄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 발생건수가 지난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 2020년 176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6년간 발생한 전체 철도 범죄 1만 849건 가운데 성범죄가 4227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 1866건, 폭력 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 828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 413건이던 철도 성범죄가 2019년 936건으로 급증했다.
서선욱기자

‘수감 잃어버리기’ 전국 1등, 광주경찰청

전국 364개 분실...광주 49개

광주·전남경찰청이 최근 3년8개월 동안 잃어버린 수감은 49개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청 중 분실 수감 수가 가장 많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경찰청은 최근 3년8개월간 각 35, 14개의 수감을 잃어버렸다.
광주경찰이 분실한 수감은 2017년 7개, 2018년 8개, 2019년 20개다. 올해 8월까지 잃어버린 수감은 없다. 하지만 전국 지방청 중 수감 분실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의 경우 2017년 2개, 2018년 6개, 2019년 5개, 올해는 8월까지 1개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에서 분실된 수감은 총 364개다. 경찰관 사칭 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 발생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만큼, 기강 확립을 통한 수감 분실 최소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경찰관이 수감을 분실한 것은 군인이 총을 분실한 것”이라며 “분실한 수감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유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